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대웅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박사과정)*

전병훈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은 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국내외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은 'ScaleUp America Initiative',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 영국은 'Scale Up Institute', 독일은 'German Accelerator',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거점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헌 등 자료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심어: 스케일업(Scale up),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 국내 스케일업 정책,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 창업 정책, 스타트업(Start up)

1. 서론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스케일업 기업은 OECD에 따르면, 기준년도 첫째 종업원수가 10명을 넘고,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최근에서야 스케일업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다. 지난 2019.3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는 "정부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최병성, 2019). 또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창업 초기단계 지원에 집중됐던 정부정책을 전환해 단계별 스케일업에 초점을 맞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2019.4월 23일 발표했다(강명연, 2019.4.23.). 이에 발맞춰 금융권에서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핀테크업체에 300억원, 스케일업에 1,0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투자할 것(김진호, 2019)" 이라 발표했다.

왜 스케일업인가? 스케일업(scale-up) 기업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과 매출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관련된 것이다. '영국 경제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보고서(Sherry Coutu, 2014)'에서는, 스케일업을 통해 영국은 3년 내 24만개의 좋은 일자리와 약 380억 파운드(약 62조원)의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도 과거 10년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7%에 불과한 반면, 스케일업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92%로 훨씬 높았다는 연구결과(SBA, 2014)가 발표되었다(강희일 외, 2017).

이러한 효과성으로 인해 해외 선진국인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 중심 정책에서 2010년 이후부터 스케일업 정책으로 전환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7월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인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발족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인 Scale

* 홍대웅,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ung97@naver.com

** 전병훈,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bhjeon@dongguk.edu

· 투고일: 2019-11-09 · 수정일: 2019-12-13 · 게재확정일: 2019-12-25

Up Institute를 설립하여 스케일업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스케일업 대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활발한 스케일업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전 부처 창업지원사업은 모두 1조1,180억 원의 규모로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창업교육(4.2%), 멘토링(2.0%), 네트워크(0.6%) 등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으로(중소벤처기업부, 2019) 창업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벤처기업 수·엔젤 투자 규모 증가 등 양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 생존률은 1년 후 62.7%, 5년 후 27.5%로 매우 낮은 수준(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으로, 2017년부터 스케일업은 위축된 반면 스타트업에 정책이 집중(70%이상 지원)되어 있다. 정부의 창업자금이 3년 이내 신생 스타트업에게 집중되어 온 탓에 우리 산업구조가 허리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스케일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게 제기된다(김용욱·한정호, 2019).

특히 3-7년 차 도약 성장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창업도약패키지와 팀스 프로그램 등이 추진 중이며, 자금 지원 중심이며, 예산 규모가 8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또한, 2015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창업 초기에 평균 매출과 평균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4-5년차에는 평균 매출과 평균 고용이 감소하고, 5년 차 생존율도 1년 차 생존율(62.7%)의 절반 이하(27.5%)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이민화, 2019)에서는 신규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과 혁신이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정책적 균형을 가져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하듯,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으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에는 추진 전략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자의 성장단계 강화 및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의 4+1 전략을 제시하고 목표로 ①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다양한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한다.

학술적으로는 스케일업 정책과 관련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는 물론, 이미 시작된 해외에서도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스케일업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체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스케일업 생태계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양현봉 외, 2008).

이처럼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고용의 확대를 의미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 자본, 사업의 노하우 및 기업가적 재능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사업화의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스타트업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고용창출은 대기업이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창업이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이갑수·김근영, 2004). 활발한 창업과 퇴출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창업하고, 구체화된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술경쟁력의 비교우위를 갖춘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게 된다. 그러나, 스타트업 활성화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경제 성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Jorge, 2016), 실질적 고용과 성장은 스케일업을 통해 일어난다. Daniel Isenberg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Korea 2016에서 한국이 스타트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기업가를 스케일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나 기존의 모델은 개별 요소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으나, Daniel Isenberg(2017)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책(Policy), 시장(Market), 인적자원(Human Capital), 지원(Support), 문화(Culture), 금융(Finance)의 6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스케일업(고성장 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필수적이므로, 따라서 스케일업을 생태계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은 ‘스케일업이 아닌 스타트업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며, 성공과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은 판매(Sales)’라고 하였다(인터비즈니스 스케일업프로젝트팀, 2018.9.3).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및 국내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스케일업 생태계의 영역과 구성요소

영역	요소	세부내용
정책 (Policy)	정부	정부의 스케일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 및 예산, 투자 및 지원 기능,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정책 연구 기관 등을 포함
	리더십	정부의 스케일업 정책에 있어서의 철학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스케일업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많은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리더십
금융 (Finance)	금융자본	스케일업 활동의 핵심 자원인 자금 조달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 및 규모에 따라 엔젤투자, 친구, 가족에서부터, 벤처캐피탈, 시모 펀드, 공공 자본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이 활용됨
	문화 (Culture)	스케일업 성공 사례를 통해 일반 기업에게 역할 모델을 부여하고, 성공 기업이 얻은 부와 명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스케일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
지원 (Supports)	사회기반 시설	스케일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기, 통신, 교통, 물류 등의 기본 인프라 시설과 함께, 스케일업의 문화를 조성하고, 협업 및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집적 공간 필요
	지원 직업군	기업의 스케일업 활동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법률, 회계, 투자자, 기술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직업군 존재
인재 (Human Capital)	노동	스케일업은 기업의 급속한 확장과 성장을 의미하므로 창의적이며,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노동력이 필수적
	교육 기관 (제도)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일반 교육 제도와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시장 (Markets)	초기 고객	기업의 판매 및 매출 성장에 필수적인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특히 해당 제품이나 기술의 시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네트워킹	기업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적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위한 시장 네트워크

자료 : Daniel Isenberg(2017)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이 재정리

III. 사례분석

3.1. 연구방법론

사회과학은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례연구방법은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가능하게 하며,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맥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미 일반화된 가정과 모순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정의 상세한 부분(subtleties)과 뉘앙스 및 정치과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intuitive feel)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분석적 기법(analytical skills)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nderson, 1994; Golembiewski & white, 1980). 대부분

의 정책 사례연구는 특별한 정책, 법령, 또는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소수 혹은 단일 정책사례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추론을 하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사례의 수를 늘리거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반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려고 한다(강은숙이달곤, 2005).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는 소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깊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소수사례연구의 방법으로 글로벌 선진국가의 스케일업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스케일업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의 혁신 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중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육성 전담 기관인 Scale Up Institute를 설립하여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인재교육 및 양성,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커뮤니티 형성 등을 제공하고, 스케일업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스케일업 대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밖에, 독일은 German Accelerator를 중심으로 미텔슈타트 4.0전략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의 정책을 살펴보는 등 해외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검토하고자 하며, 국내 스케일업 정책으로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관계부처합동, 2019.3.6.)’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정책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정책 분석

해외 주요국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정책을 추진 중으로, EU, 영국 등은 ‘소수의 리더급 스타트업의 고성장(Scale-up)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인식하에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EU) 3%의 스타트업이 성장(scale-up)하여 EU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EC, ‘16),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54%의 신규 일자리 창출(NESTA, ‘09)하고, (EU)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16) 추진, (영국) 스케일업 전담기관인 Scale Up Institute(‘14) 설립하였다. 독일, 프랑스도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단위로 가젤기업 육성정책 추진하였으며, (독일) German Accelerator(‘12), (프랑스) 프랑스공공투자은행(‘12), French Tech(‘13) 등을 설립하였다.

특이점으로는 글로벌 스케일업 선두국가에서는 스케일업(Scale-up)을 매출·고용 등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기업을 의미하며, 국가나 기관별로 스케일업의 정의·조건과 명칭이

다르나, 공통적으로 ‘고성장’에 집중하였다. ‘14년 영국의 창업가인 Sherry Coutu가 고성장기업을 ‘스케일업(Scale-up)’으로 명명하며 대중화되었다. (The Scale-up Report on UK Economic Growth(‘14)) EU(SEP Monitor)는 세분화된 분류를 사용하는데, 스타트업에서 2010년 이후 투자 가치가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스케일업(Sherry Coutu, 2014)으로 정의하며, 이후 스케일러(Scaler, 1억 달러), 슈퍼 스케일러(Super Scaler, 10억 달러)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가·기관별 스케일업 정의

구분		내용
스케일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이후 100만 달러(약 11억)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스케일러) 설립 이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슈퍼 스케일러)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이 10명 이상인면서, (매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성장하거나, (고용)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NE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용성장률을 기록한 기업
가젤기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매출이 1,000만 위안 이상이며, 매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중 매출액이 3년간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한 업력 5년의 기업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의 특징은 스케일업에 대해 국가별로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국의 대표 스케일업 지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미국 스케일업 지원 정책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주도하에 총 3차에 걸친 혁신전략(2009~2015)을 통해 국가 성장을 꾀하였는데, 특히 2011년 발족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SAI)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가지 주요 분야는 1) 자금 접근성 2) 멘토연결 3) 장벽 제거 4) 기술 혁신 5) 공공분야 사업기회 제공으로 요약되며, 특히 연방정부를 스타트업의 성장에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제품 및 서비스 구매자로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스케일업 정책은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주도하에 2014년 7월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인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발족하였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스케일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그간의 정책을 유지하

고 있다(조만석·김선우, 2017). 주요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표 3> Scale Up America Initiative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	성장 지향형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검증된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을 제공
경영지원	시장 분석, 경영전략 수립, 마케팅 등에 대해 1대1 멘토링, 기술지원
금융 접근성	대출, 투자자와의 매칭 등 자본 접근성 확대
네트워킹	지역 CEO, 생산자, 공급자,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자료 : Scale Up America Initiative(‘14.7)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미국은 스케일업 기업수 22,910개 보유, 투자금액은 \$730.7B으로, GDP대비 3.58%를 달성했다.

3.2.2 EU 스케일업 지원 정책

EU의 2016년 추진된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는 제도 완화, 자금 접근성 제고, 혁신 기반 강화 등 스타트업·스케일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VentureEU(‘18)을 설립 최대 65억 유로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디지털, 생명 과학, 의료 기술, 자원 및 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STEPI, 2017). ‘EU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는 기업가에게 가장 큰 문제를 금융접근성 및 규제, 행정으로 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 및 보다 깊고 공정한 단일 마켓을 구축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니셔티브 주요 목표는 1) 단일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장벽 제거 2) 파트너십, 비즈니스 기회 및 기술을 통한 더 좋은 기회 창출 3) 금융에 대한 쉬운 접근성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 기업들의 주요 장애물로 1) 재정 접근 및 확대) 2) 고용 및 유지 3) 규제 및 세금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스케일업을 위한 핵심 정책/방법으로 1) 거대 기업과의 관계 구축 2) 고속 성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3)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등이 제시되었으며, 생태계적 관점에서는 1) 지역 관점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2) EU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 3) EU 전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이 제시되었다(STEPI, 2017).

즉,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자본, Exit, 시장, Network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거대시장의 존재’ 및 ‘거대기업과의 연결’, 그리고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

EU의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는 이러한 문제 및 방법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이 유럽 전역에서 성장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핵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표 4> EU 스타트업 성장 프레임워크

구분	내용
재정적근 성 개선	Pan-European Venture Capital Fund를 출범하고 EU로 부터 최대 4억 유로의 초기 투자 및 최대 16억 유로의 자금으로 Horizon 2020과 같은 EU의 연구 및 혁신 기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완
기업가 재도전 기회제공	파산법에 관한 입법안 제출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기에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직한 기업가가 최대 3년 후 완전히 채무를 면제받아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간단한 세금신고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CCCTB(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에 세금을 단순화하는 제안추진
기타	규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Horizon 2020의 혁신을 통해 혁신 지원을 개선하여 스타트업이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대학, 연구소와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육성을 중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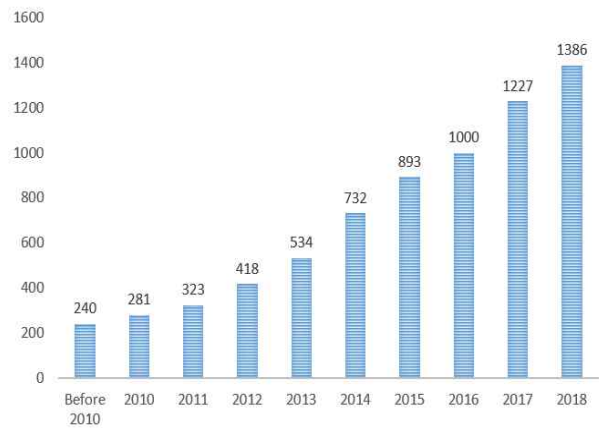
자료 : 이민화(2019),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재정리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서 공개 응답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쟁점은 첫 번째로,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로, 크게 정보(Information)와 규제(Regulatory)로 구분하여 EU 내 조세·행정 절차·법 등을 단일화·간소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 비용·시간의 경제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의 측면에서는 CCCTB(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도입, EU내 부가가치세 제도 간소화, 타 회원국의 우수 벤처 캐피탈 조세제도 확대 등이다. 행정적 측면은 온라인 행정 플랫폼 ‘Single Digital Gateway’를 구축, 단일 시장 정보, 전자행정, 기타 지원 보조 업무 제공이며, 파산법은 EU단일의 파산법안을 마련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초기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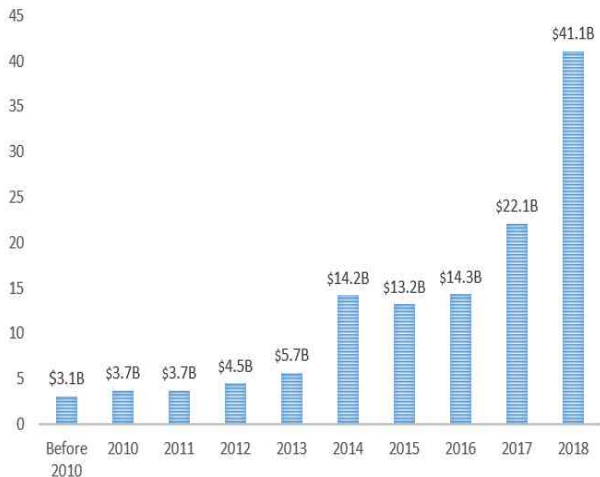
두 번째 쟁점인 기회 창출(Create Opportunity)은 생태계 및 연결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모니터링, 매칭, 혁신, 공공조달, 사회적 기업, 기술적 역량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킹으로 회원국 내 스타트업 클러스터, 혁신파트너(투자자 등) 등을 통한 지역생태계 구축이며, 공공조달 구매자 네트워킹을 구축, 회원국의 공공조달 구매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IP) 지원·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가 발표된 후 첫 번째 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혁신 공공조달(Innovation procurement)에서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2.5배 이상 더 많은 계약을 체결(73% vs. 29%)하였으며, 유럽의 공공조달 평균보다 15배 더 많은 계약(29% vs 2%)이 체결되었다.

세 번째는 금융 제공(Provide Finance)은 스타트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유럽 VC 펀드, H2020, COSME 등과 융합,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다. 특히 범유럽 벤처캐피탈 모태 펀드(Pan European Venture Capital Fund of Funds)를출범하여 최대 4억 유로의 초기 투자금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최근발표 된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에 따르면, 유럽 Scaleups의 수가 매년 평균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2018년 +13%). 유럽에서는 2018년에 약 1400개의 Scaleups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성장 패턴은 투자된 자본의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 2017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럽 규모 확장에 투자한 자본은 전 3년(2014-2016년)보다 평균 14B달러에서 22B달러로 급증했다. 2018년도의 핵심은 투자금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스케일업 생태계에 40억 달러이상의 자금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에서는 <그림 1>과 같이 2018년도 EU 신규 스케일업 기업 수와 <그림 2>와 같이 EU 신규 투자금액 규모(\$B)가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2018년 EU 신규 스케일업 기업 수



<그림 2> EU 신규 투자금액 규모(\$B)

3.2.3 영국 스케일업 지원 정책

영국은 2011년 스타트업브리튼 계획(Startup Britain Initiative)으로 학교의 자체 기업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업가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2013) 또한 영국은 정부의 스타트업브리튼 계획 이후 꾸준하게 스타트업의 수가 늘어 2011년 440,600개에서 149%가 상승한 657,790개의 스타트업(2016년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다(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StartUp Britain, 2011).

스타트업 브리튼은 기업지원자 프로그램(Enterprise Champions Programme), 기업 단체(Enterprise societies), 창업교육 프로그램 ‘테너 타이쿤(Tenner Tycoon), 혁신런치패드(Innovation Launch Pad), 브라이튼 퓨즈(Brighton Fuse)’ 등의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발표한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는 소기업가를 위한 스케일업 정책으로 스타트업 이후 확장 및 지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국기업혁신기술부(BIS)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소기업가 스케일업 정책

구분	내용
재정 사업의 제고 (finance business growth)	소기업가를 위한 금융분야 재구축 1) 특정목적 용도지정조치로 기업 활동의 수행과 전문성을 제고 2) 비은행권의 대출과 사모펀드 접근 지원 3) 공공조달계획의 일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연체로 문제 해결 4) 세금감면혜택 등을 추진함
직원고용 (hire people)	1) 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2) 맞춤형 일자리 매칭서비스 ‘universal jobmatch’ 이용 3) ‘university technical colleges’ 설립 전문인력양성 4) 해외 기술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아이디어의 개발 (develop new ideas)	1) R&D비용 세금감면과 보조금 2)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3) ‘catapult centres’를 통한 장비 및 기술 지원 4) 전문가를 통한 지식재산권보호 등의 방안
새로운 시장진입 (break into new markets)	1) 공공조달 개방 2) 온라인 사이트 확장 3) 수출 조인 및 지원 제공 4) 특정 산업 및 시장 장벽 제거
적시 적절한 지원 찾기 (find the right support at the right time)	1) 맞춤형 재정 및 지원 정보 검색 2) ‘Growth Hubs’를 통해 가입된 지역의 지원서비스 3) 민간부문 파트너와의 협력촉진 등
사업의수행 (get on with doing business)	1) 네거티브 규제방식 2)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3) 복잡한 규제 지침의 정비 4) ‘Small Business Appeals Champions’를 통해 불공정한 결정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 등

자료 :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2013) 재구성

정부 차원에서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유럽 내 스타트업·스케일업 강국으로 ‘17년 1,668개의 ICT 스케일업을 보유하고 275

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성하였다(SEP Monitor, 2018 Tech Scaleup Europe ‘18 Report).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창업 클러스터 기관인 Tech Nation은 2011년부터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각 단계별 맞춤 정보를 제공 및 우수사례를 제공하는 ‘touchpaper’ 툴킷을 활용한 기존 기업과의 매칭, 그리고 스타트업간의 협업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디지털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이며, 이를 통해 핀테크, 인공 지능(AI), 사이버, 게임 등 디지털 분야의 인재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 최대 5년 4개월간 영국 체류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로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인 Scale Up Institute를 설립하였으며, 주요 목적은 영국 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고성장과 지속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하고, 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케일업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인재 교육·양성 분야는 ‘Careers and Enterprise Company(CEC)’로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CEO등 멘토/자금지원)이며, 리더십 역량 강화 분야는 ‘Entrepreneurs Forum: Scale-up Leaders Academy’로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코칭 등 10개월 동안의 리더십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성 제고분야는 ‘Sharing in Growth (SiG)’ 2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 시작되었다. 자금 확충 분야에서는 ‘ELITE programme’으로, 기업/전문가/투자자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투자유치를 돕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에서는 ‘Google Campus London’ 등 창업자를 입주공간과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이를 통해 2018년도에는 2,217개의 스케일업 기업, \$39.5B의 투자액을 달성하였다(SEP, 2019).

3.2.4 독일 스케일업 지원 정책

독일은 German Accelerator(‘12-)를 통해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국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위해 실리콘벨리와 뉴욕에 지사를 설립 현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요 지원은 3~9개월 동안 무료로 ‘제품의 시장 접합성, 미국 시장 진입, 투자금 유치 등 특화된 주제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리더십 역량 개발, 미국법 구조 이해, 재무 전략 등’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기타 운영 지원을 위한 ‘미국내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취득 등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9개 산업 분야 170개 스타트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뉴욕지사 47개, 실리콘벨리 지사 123개 기업). 특징은 성장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로 ‘유럽투자자기금(EIF) 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의 벤처캐피탈 모태펀드로 평균 2,000만~6,000만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엔젤펀드를 조성하여 약 80명의 엔젤투자자와 공동으로 투

자하여 성장단계의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있고, ‘Coparion 공동 투자 기금’으로 민간 투자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성장단계의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하고 있으며, ‘기본 보증(Default guarantees)’으로 스타트업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처 Financing start-ups and growth: Overview of existing instruments 재구성).

또한 미텔슈탄트 4.0 전략(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2018)은 독일정부의 디지털 아젠다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특히 중간 및 중소기업(미텔슈탄트, Mittelstand)의 디지털화 혁신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BMWi)의 기업지원 사업이다.

이는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 도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속화(BDI, Noerr, 2016)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독일 전체 기업 중의 99.6%를 차지하는 미텔슈탄트는 디지털화 전환 속도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의 ‘2015 경제 디지털화 평가보고서(Monitoring-Report Wirtschaft DIGITAL 2015)’에 따르면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5), ICT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며 자체적으로 평가한 독일 산업 및 경제의 디지털화 지수는 49점(100점 기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디지털화 성과가 더딘 미텔슈탄트(중간 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하고, 이들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구조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6> 독일 미텔슈탄트 디지털화 전략의 원칙

1	기업 작업장의 품질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단순화 전략
2	기업의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한 e표준화 전략
3	디지털화의 생산 및 작업 프로세스를 위한 미텔슈탄트 4.0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15)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의 2017 보고서 ‘경영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텔슈탄트-디지털-전략(Mittelstand-Digital-Strategien zur Digitalen Transformation der Unternehmens)’에 따르면(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7), 본 전략의 지원으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성공기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러 지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지역관할 센터’와 연방관할 ‘디지털 수공업 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무역거래, 제조업 및 네트워크 구축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식 및 정보, 노하우 전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지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따라 중점을 두는 지원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 8개 정도의 지역의 정책 차이를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에 따르면, 2018년도에 독일은 649개의 스케일업을 보유했으며, \$18.7B의 투자금액을 유치하였다.

<표 7> 독일 거점 도시별 중소기업 4.0 역량센터 현황

거점 도시	주요 지원 내용
아우스부르크	지동화, 소프트웨어, 어시스트 시스템, 노동 4.0, 운송, 디지털 사업 모델을 지원
베를린	부가가치 과정 4.0, 디지털 마케팅, 사업 모델과 인력 관리를 지원
브레멘	해운·운송, 풍력 에너지, 우주공학, 자동차산업, 식품 및 기호품 분야에서의 혁신 클러스터 전문인과 경영인 등 ‘디지털 프라자’ 양성을 지원
켄너츠	IT 법과 데이터보호에 대한 ‘인더스트리 4.0’ 서비스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
코트부스	학습 컨설팅, 신기술 및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 경영진과 사회적 파트너 연결을 지원
다름슈타트	효과적 부가가치 프로세스 지향, 노동 4.0, IT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 관리 기업을 지원
도르트문트	생산 시스템의 인공지능 자동화를 지원
함부르크	공급사슬과 같은 물류 분야에 대한 초점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

자료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 ‘Förderinitiative Mittelstand 4.0 - Digitale Produktions- und Arbeitsprozesse’

3.2.4 프랑스 스케일업 지원 정책

프랑스가 주력한 제도 개혁 분야는 영국이나 독일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은 스타트업 환경 개선부분으로, 특히 세금, 투자 및 노동 환경이었다(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2018).

이는 2009년 경제 위기이후 개인기업 설립이 간편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였으나 세금, 투자, 노동 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등이 여전히 창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였다. 부자들에게 대한 높은 세율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벤처 캐피털도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프랑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동시에 프랑스의 까다로운 해고 조건과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노동 환경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스타트업 환경은 프랑스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으며, 창업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쉬운 창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였는데,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스타트업의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8> 프랑스 창업 및 스타트업 성장 제도 혁신

구분	내용
투자환경 개선분야	R&D 투자금에 대한 세율과 인센티브 제도를 영국,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 개선하고, 스타트업 창업 이후 8년 동안 감세혜택을 제공
노동환경 개선분야	개인 창업 기업에만 주어지던 까다로운 고용관련 예외 규정을 스타트업에까지 확장하여 8개월 이내 해고 허용, 경제적 이유 등 보다 완화된 해고 규정 적용, 35시간 노동 예외 조항 적용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
	비고용자와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대폭 낮추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자료 :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2018 재구성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스타트업을 위한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2013)의 추진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2015년 기준 투자 건수로는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환경과 프랑스인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 역량 개발에 투자하고, 지식경제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에게 진로 결정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력 경로(career path)’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프렌치 테크의 목적은 디지털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확립하고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다음의 3가지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표 9>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2013)

구분	내용
네트워크 그룹화와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프렌치 테크 메트로폴(les Métropoles French Tech)’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식별된 지역에 부여되는 프렌치 테크의 지역 인증표이자, 지역별 네트워크 및 에코 시스템임.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에코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프렌치 테크 메트로폴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9개의 프랑스 전국적인 ‘프렌치 테마 네트워크(les Réseau Thématique French Tech)’를 구성하기로 결정
스타트업의 급속성장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 및 시기적절한 지원제공	프렌치 테크 패스(Pass French Tech)는 스타트업 기업의 보다 빠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 혜택 패키지로 그 주요 혜택은 국내외 인지도 증가, 별도의 요청 없이도 자연적으로 정부 기관의 다양한 행사 지원 혜택, 간편한 행정 지원 절차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컨설팅, 베스트 스타트업 기업 네트워크 참여 등을 제공 프렌치 테크 가속화 자금(Fonds French Tech Accélération)은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 촉진 서비스(컨설팅, 인재 채용, 프로토타입 플랫폼 서비스, 제품 상업화 지원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회사나 시스템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제공 프렌치 테크 보조금(Bourse French Tech)은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분야에 관계없이, 프랑스 내에서 1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함

스타트업의 해외 소개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렌치 테크는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해외 시장에서의 빠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의 주요 혁신 도시(샌프란시스코, 뉴욕, 이스라엘, 도쿄, 몬트리올, 홍콩, 모스코바, 바르셀로나, 런던, 아비장, 케이프타운, 서울)에 프렌치 테크의 거점인 프렌치 테크 허브(les hubs French Tec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외의 우수 인재가 프랑스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을 운영하는데, 선정된 프로젝트에 1년 동안 약 4만 5천 유로의 자금과 프랑스 내의 사무실을 지원함. 또한 비자, French Tech Visa) 창업자, 해외 인재, 투자자 등을 위한 비자 발급 및 거주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 이벤트, 멘토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회의 데모데이 행사 등을 지원하는 한편, 프랑스 거주를 위한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도와줌으로써,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발전과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자료 :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2013) 재가공

그 외에 프랑스는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Station F34)를 운영 하고 있다(김병용, 2018). 스테이션 F는 프랑스 세느강 근처에 역사적인 건물(과거 기차역)을 개조해서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서 프랑스의 기업이 ‘자비에 니엘’이 2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3만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스테이션 F는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루이비통을 비롯해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네이버도 참여하여 증강현실 콘텐츠업을 육성하는 ‘스페이스 그린’을 런칭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Pass French Tech(‘14~)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의 고성장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French Tech Ticket(‘15~)를 통해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12~)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규모 등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무보증 대출 프로그램-설립대출(Prêt d’amorçage)’, ‘프로젝트 보조 프로그램-혁신성 개발 보조’, ‘테마별 투자-French Tech Accélération (프렌치테크 가속화 프로그램) 투자’, ‘은행보증 프로그램-중소기업 개발 보증’, ‘동행·코칭 프로그램-Pass French Tech’가 있다.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 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8년 859개의 스케일업보유, \$12.7B의 투자금액을 달성하였다.

3.2.5 중국 스케일업 지원 정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에 따르면, 중국의 스케일업 기업을 가젤기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젤기업은 ‘연매출이 1,000만 위안(약 16억) 이상이며, 매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2017년 중국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이하 국가고신구)의 가젤기업 수는 2,875개(국가고신 전체 기업의 2.96%)로 전년 대비 281개(10.9%) 증가하였으며,

평균 6.43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가젤기업의 57.37%(1,639개)는 10개의 국가고신구에 위치하며, 중국의 가젤기업 지원·육성 정책은 국가고신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가젤기업 보유 수 상위 10위의 국가고신구는 중관촌(中關村), 상하이 장강(上海張江),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우한 동후(武漢東湖), 샤먼(廈門), 청두(成都), 시안(西安) 순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가고신구별 가젤기업 지원·육성 정책은 대출 우대·완화, 보조금 지급 등 금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지역 5개의 구체적인 정책특징은 2017년 기준으로 ‘중관촌’은 661개의 가젤기업이 있으며, 5성 등급 체계로 가젤기업을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이자 보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선전’은 123개의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유니콘기업 및 잠재유니콘기업 선정 기준체계 구축’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실시’, ‘선전시 유니콘 기업 육성 발전기금 설립 지원’을 하고 있다.

‘광저우’는 116개의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젤기업 인증’과 인증기업 중 잠재유니콘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쑤저우’는 100개의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가젤기업 장려금’ 및 ‘정부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인계 추천, 토지·건물 양도 등에 우선권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항저우’는 85개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려금’, 신용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정부조달, 프로젝트 선정, 투자 유치, 토지 사용, 인재 추천 등에 우선권 부여’ 및 ‘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에 융자담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관련 세금 면제, 리스크 보상, 장려금 제공’을 하고 있다.

‘우한 동후’의 경우 85개의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전략, 인력, 정보화 등 컨설팅 비용의 50%(연간 최대 30만 위안)를 지원’과 ‘5년 안에 500명의 가젤기업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50%의 지원금 지급’, 가젤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최대 80%의 리스크를 보상하고 있다.

‘샤먼’은 유니콘(준유니콘)기업이 샤먼으로 이전시 최대 500만 위안의 정착금을 지원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생물·신약, 신재료,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청두’의 경우 60개의 가젤기업이 있으며, 100억 위안 유니콘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시드기업, 가젤기업, 유니콘 기업, 업계 선도 기업으로 구분한 ‘신경제 기업 단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안’은 53개의 가젤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장려금, 해외 전시회나 투자유치 행사 참여 지원, 중국품질인증센터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브랜드가치나 제조업 브랜드 가치에 선정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도 스케일업 9,93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337.3B를 달성하였다(SEP, 2019).

<표 10> 주요 국가별 대표 스케일업 지원정책 특징

구분	내용	
미국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2009) 경제 성장과 번영 확보를 목표로 시장 기반 혁신촉진(기업가 정신고취/2011) 미래 신산업육성과 국가과제 해결 목표(2015)
	Startup America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접근성, 멘토연결, 장벽제거, 기술혁신, 공공분야 사업기회 제공(연방 정부를 스타트업 성장에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는 구매자로 보고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스템혁신)
EU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완화, 자금 접근성 제고, 혁신 기반 강화 등 스타트업-스케일업 성장 생태계구축
	VentureEU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65억 유로의 신규 투자를 유지하여 디지털, 생명 과학, 의료 기술, 자원 및 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
영국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사업의 제고, 직원고용, 아이디어의 개발, 새로운 시장 진입, 적시 적절한 지원 찾기, 사업의 수행을 지원
	Scale Up Institute('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육성전담기구로 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중심으로 지원
	Tech Nation('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Rising Star → Upscale →Future Fifty
독일	German Accelerator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독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 (지원분야) 상용화 또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IP)을 가진 독일 기업 (지원분야) SaaS,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반도체, 사물인터넷(IoT),인공 지능(AI) 모태펀드, 유럽엔젤펀드, 공동 투자기금, 기본 보증 등 자금지원 미텔슈타트 4.0 전략 중간 및 중소기업들 디지털화 혁신 지원 (단순화, e표준화, 디지털화)
	La French Tech('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그룹화와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스타트업의 급속성장 환경조성 및 시기적절한 지원제공 스타트업의 해외 소개 및 해외 진출지원
프랑스	Pass French Tech('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스타트업의 고성장을 패카지형으로 지원
	French Tech Ticket('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패카지형 지원 방안
	French Tech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 해외 인재, 투자자 등을 위한 비자발급 및 거주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Bpifrance,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은 공공예탁 금고를 통한 자금지원
중국	중관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성 등급제로 가젤기업을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쑤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젤기업에 정부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인재 추천, 토지·건물 양도 등에 우선권 부여
	우한 동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안에 500명의 가젤기업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
	샤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생물·신약, 신재료,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우선지원
	청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드기업, 가젤기업, 유니콘 기업, 업계 선도 기업으로 구분한 ‘신경제 기업 단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외 재구성

3.3. 국내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 분석

국내의 스케일업 지원 및 생태계를 살펴보면, 국내 스타트업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창업 환경은 양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벤처기업 수·엔젤투자 규모 증가 등 양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부처 창업지원사업은 모두 1조1,180억 원의 규모로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창업교육(4.2%), 멘토링(2.0%), 네트워크(0.6%) 등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그러나, 창업 3~7년 이내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지원정책의 비중 면에서도 스타트업단계에 치중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7년 차 도약 성장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창업도약패키지와 팀스 프로그램 등이 있고, 자금 지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 13,715개사 중 실제 수혜 기업은 1,600개사에 그쳐 신청 기업 중 12%만이 지원 가능했고, 지원 예산 규모는 2018년 기준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 전체 규모인 5.8조에서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7년 차 도약 성장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창업도약패키지와 팀스 프로그램 등이 추진 중이며, 자금 지원 중심이며, 예산 규모가 800억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2015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창업 초기에 평균 매출과 평균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4~5년차에는 평균 매출과 평균 고용이 감소하고, 5년 차 생존율도 1년 차 생존율(62.7%)의 절반 이하(27.5%)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유사한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 등이 있다.

창업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양적 효율을 통한 시장과의 결합이 필요하므로 고성장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과 혁신이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정책적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심 정책기관의 강화이다.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급) 행정기관으로 승격하여, 중소·벤처 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정부조직법 제 26조 제1항 제18호)

구체적으로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타 부처에서 수행하던 중소벤처 기업지원의 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화된 것이다.

<표 11>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위한 기능강화

기존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업무	강화된 역할 및 기대효과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관련 기업 육성을 담당) 이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투자 기능을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 및 지역산업, 기업협력 지원에 관한사무 -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 예산 및 테크노파크 관리·감독 권한이관	테크노파크는 제품제작, 시험 인증 등 보육기능에 집중하는 형태의 운영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사무 - 기술보증기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담당) 이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신용보증에서 기술평가까지의 일원화 가능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9 재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 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을 2019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 6,7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조성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 3,620억 원이 배정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무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이다. 조직체계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그 소속 사무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으며,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두고 있다.

2018~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2018년도 업무계획은 ‘사람중심 중소·벤처기업으로 경제구조 대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목표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육성’, ‘꿈을 실현하는 벤처기업 생태계’, ‘공존과 활력으로 우뚝서는 소상공인’으로 수립하였다.

정책개편방향으로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1)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2)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3) 강력한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중기청 소관 정책 차등에서 범정부 중기정책 총괄·조정 독자 법안 제출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신설부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였다. 5대 국정과제는 [일자리·소득성장]에서, 근무환경 등 대기업과 격차완화를 통한 인력란 해소, [혁신성장] 측면은 창업국가 조성,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공정경제] 측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자생력제고를 제시하였다.

비 전	사람중심 중소·벤처기업으로 경제구조 大 전환		
목 표	중소기업 일하고 싶은 강소 기업으로 육성	창업·벤처기업 꿈을 실현하는 창업· 벤처 생태계	소상공인 공존과 활력으로 우독서는 소상공인

정책개편방향

구분	기존	개선
새정부 경제 전략실천	대기업 중심 성장	세 가지 축 성장 전략 (일자리 소득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신설부처 역할 강화	중기청 소관 정책치중 법안제출권 無 집행중심	법정부 중기정책 총괄·조정 독자 법안제출 및 기획기능강화
국민감동 실현	분절적·단편적 지원 정부주도 지원 타당 행정 중심 지원사업 관행적 지속	일관지원체계 및 스크럼 방식 지원 민간 주도 지원 현장 소통·기획 강화 성과평가를 통해 일자리 중심 개편

주요정책-5대 국정과제

격차완화 통한 인력난 해소	창업국가 조성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대·중기 상생협력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일자리·소득성장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림 3> 2018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업무계획에서 2018년 핵심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를 보면 1)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도입(2018년까지 7,903개)을 통한 제조혁신·산단혁신·일터혁신을 추진 2)민간제안펀드 신설(4,077억원), 모태펀드 추경 출자(2018년 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 3) 혁신모험펀드 2020년까지 10조원(2018년 3.5조원), 벤처업계 제안수용(규제완화 등 129건 정책에 반영) 등을 통해 창업·벤처의 성장 촉진 4)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2018.4부터), 채무감면 등 추진 5) 민간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2018.2월부터), 메이커스페이스 신설(65개), 창업부담금(12→16종)·세제감면 확대 등을 추진 6) 매출액 없어도 기술 있는 기업에 과감히 정책금융 공급 7)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8)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법 개정(2018.10)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9)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의 위원회가 공공기관 구매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신설(2018.5) 10) 온라인수출 지원(2018. 2,025개), 수출예로 해소(4,377건) 등 추진 1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신설(2018.6, 5년후 3천만원 목돈 마련) 과감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에 최대 2,100만원/청년고용) 등을 추진 12) 수탁기업 상생결제 지급의무화(2018.3), 상생기금 출연근거 마련(2018.5)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상생협력을 촉진 13)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최초 실시(유통 PB, 2018.1), 부당 경영 정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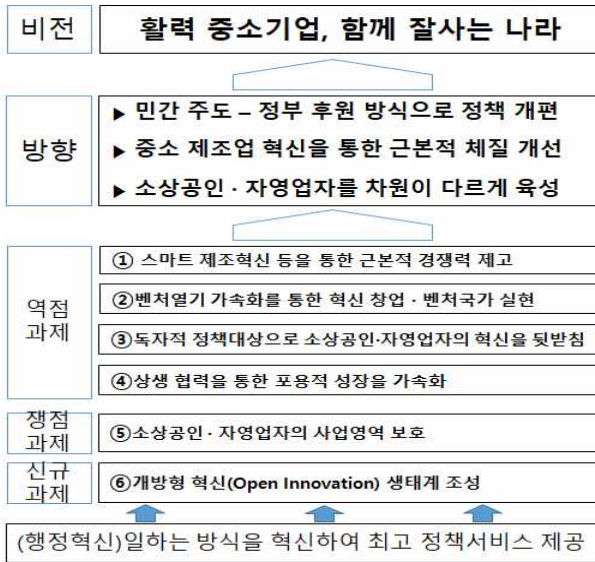
구 금지(2018.12, 상생법),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설(2018.6) 등 추진 14)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18년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음 15) 주차장 건립(누적, 1,078개), 화재알림시설 구축(255곳) 및 안전지킴이 지정(300곳),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을 추진한 점을 제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2019).

스케일업 측면에서는 ‘벤처투자’ 부분에서 ‘18년 벤처투자 3조 4,249억원, 펀드조성 4조 6,868억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원을 달성하여, 투자부분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니콘 기업’ 부분에서 유니콘(2017. 3개→2019.1. 6개) 천억 벤처(513→572개) 및 1조원 벤처(4→11개) 증가한 것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며, 그 외 연대보증 폐지, 채무감면 등을 추진, 세제감면 확대, 규제혁신과 수출촉진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판매력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신설하였으나, 126개 제품, 268억원 구매, 참여 공공기관 확대(2018.5. 6개→12월 60개)에 그친 점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 업무계획의 추진방향은 1) ‘민간 주도 + 정부 후원’ 방식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제2의 벤처붐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신산업 진출,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병행, 2) 스마트공장 및 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정책 확대 등 인력 미스매치 해결 본격 추진),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삼아 차원이 다르게 육성(비용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면서 신제품개발, 공동마케팅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 역점추진과제로는 첫 번째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공장 보급 및 R&D·금융·공공구매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공장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2만개 → 3만개, 2022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R&D정책을 개편’, ‘지역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계획하였고, 두 번째로는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으로, 추진방향을 ‘2019년에는 창업, 투자회수, 제도전 및 규제혁신 등을 전 방위로 지원하여 벤처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창의력이 풍부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유니콘 기업 등 스타벤처 육성: 스케일업 생태계 및 규제혁신’, ‘고급 기술인력의 혁신 창업 활성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 확산’, ‘제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2019 중소기업부 업무계획

세 번째로는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 정책대상으로 본격 육성하는 원년으로 매출증대·비용절감 등과 동시에 자생력 제고 병행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기반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유도’, ‘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재기·퇴로 지원’,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및 복지 확충’으로 계획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로, ‘상생협력의 기본(필요조건)인 불공정거래·기술탈취는 반드시 해결’과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상생 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한 단계 발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정 거래환경 조성과 불공정 사례는 확고히 엄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더욱 강화’,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을 유도’로 제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또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5가지 전략 중 [전략 3]에 그 핵심내용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19.3.6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전략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 및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의 4+1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로 ①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②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③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각각의 전략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로는 첫번째, ‘신산업 창업’으로, 바이오·핀테크·AI·ICT 등 분야 창업 촉진과 두번째, ‘기술인재 고기술 창업’으로 대학·연구소 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하고, 이에 투자·멘토링·기술지원 등 강화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술형 창업’을 위한 신산업 분야와 그에 따른 인력양성부문의 강조하고 있다.

[전략 2]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는 첫번째, ‘혁신 벤처 투자제도’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제도 기반 마련과 두 번째, ‘엔젤·초기 투자 확충’으로 엔젤투자·클라우드펀딩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 3]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은 첫 번째로는 ‘스케일업 지원’으로 간접금융 연계,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지원과 두 번째로 ‘글로벌화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 해외VC 등 연계 지원 강화로 그 핵심은 기업성장의 자금(금융, 펀드, 보증)지원에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조성과 신남방권의 개척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4]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으로, 첫 번째로는 ‘민간 참여 확대’로 기업·투자자 등의 회수시장 참여 촉진이며, 두 번째로는 ‘엔젤·초기투자 회수’ 엔젤 구주의 회수 활성화로 재투자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 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으로, 첫 번째 ‘규제 재설계’로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건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우수 인재’ 벤처기업에 인재유입 유도 및 혁신인재 양성이다. 세 번째로는 ‘창업거점’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매월 신산업 분야별 경진대회 개최 →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회 확대, 창업열기 지속)개최,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 판교밸리·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벤처 붐 확산이다. 이를 요약하면, ‘신 기술분야, 민간 투자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지원,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인력양성, 창업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지원 전략은 ‘금융, 투자자금 지원’에 핵심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내 벤처 붐 전략은 금융, 투자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제2벤처 ‘붐’ 전략

IV. 국내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방향(안) 도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 방향을 Daniel Isenberg(2017)의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의 요소별로 [표 1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Daniel Isenberg는 기업생태계 구조(Domains of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논의하였고, Sherry Coutu(2014)는 아이젠버그 교수의 기업생태계 구조를 사용하여 영국 스케일업 정책을 위한 분석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Scaleup Institute(2016)는 Sherry Coutu(2014)의 후속 보고서로 스케일업의 중요성과 국가 및 지역 단위 스케일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한 스케일업 측정지표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활용된 아이젠버그 교수의 모델을 참조하여 국내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표 12> 국내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 방향(안)

영역	요소	세부내용
정책 (Policy)	정부	중소기업벤처부로 많은 부분 통합이 되어,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의 정의, 성장단계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국가 스케일업 정의 및 성장단계의 기준 마련 필요.
	리더십	창업 및 스케일업의 인식제고, 기업이 정신의 확산을 위한 ‘국가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에 대한 연구 및 민/관/학연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케일업 통합 기구 설립 필요 · (가칭)대한민국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 · (가칭)Korea Scale Up Institute
금융 (Finance)	금융 자본	국내 스케일업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금융자본으로 최근 엔젤투자, 액셀러레이터(Tips), VC 등 성장단계별 투자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통합적 금융 정책과 연구, 실행을 위한 체계 필요 ex) Scaleup Finance platform
문화 (Culture)	성공 스토리	스케일업 우수사례를 국내외 전파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미디어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가칭) 스케일업 CEO 열전 등
	사회 규범	스케일업 기업이 정신센터 등 스케일업 활동가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전을 장려하여 사회적 규범화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 · (가칭)스케일업 기업가정신 교육 및 제도전 프로그램 등
지원 (Supports)	사회 기반 시설	국내에는 산업중심의 제조산업, 바이오 산업 단지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성장이 아닌 사업운영 중심으로, 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아우르는 지역별 스케일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통한 핵심 요소의 구성과, 결합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의 기구와, 플레이어의 활동 지원 필요. · (가칭) 국가 스케일업 혁신 클러스터

지원 직업군		기업의 스케일업 활동에 분야별 외부전문가 그룹을 확보 관리하며, 이를 통합하여 매칭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운영체계 필요. ex) 영국 ELITE programme
인재 (Human Capital)	노동	국내 인력의 양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인력확보가 원활하도록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ex) 영국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프랑스 French Tech Visa
	교육 기관 (제도)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일반 교육 제도와 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ex) 영국 Careers and Enterprise Company(CEC), Entrepreneurs Forum: Scale-up Leaders Academy
시장 (Markets)	초기 고객	기업의 판매 및 매출 성장에 필수적인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장성테스트 지원이 필요.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스타트업 제품/서비스를 구매추진이 필요함. · 스타트업 전용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하자 정부담보 등)
	네트 워크	글로벌 진출 및 글로벌 자금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 필요, 국내도 KOTRA 및 본투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이 있으나, 통합전략에 따른 운영 시스템이 필요. ex) German Accelerator(‘12-) 미국 실리콘밸리 및 뉴욕지사 설립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스케일업(scale-up) 기업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과 매출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과, 국내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지원 사례와 국내 스케일업 정책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은 스케일업의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전담기관을 통해 자금, 시장진출, 규제혁신, 네트워킹,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성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에서 제시한 다양한 영역 중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EU, 영국 등 글로벌 국가에서는 ‘EU는 투자유치 기준’이며, ‘OECD는 매출액과 고용의 증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일부 보고서 및 문헌에서는 OECD 기준인 ‘직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이 20%이상 증가한 기업’을 준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려한 정의와 기준 수립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양적, 질적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성장 기업군의 평균적인 지표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스케일업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사례로는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스케일업(Scale-up)’은 설립 이후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케일러(Scaler)’는 설립 이후 1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슈퍼스케일러(Super Scaler)’는 10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스케일업 기업의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수립을 통한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국내의 경우 투자유치 단계에 따라 ‘Seed투자 3억원내외’, ‘시리즈 A 10억원내외’, ‘시리즈 B 50억원내외’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를 활용하여,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 단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국내 스케일업 생태계의 구성요소의 정의가 필요하다. Daniel Isenberg는 6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 스케일업(고성장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필수적이므로, 스케일업을 생태계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하다. 스케일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상호 인과성(Mutual Causality)을 가지며,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을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결(Connected Interacting) 상태라고 제시하였다.

국내 스케일업 강화와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여, 스케일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상호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스케일업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전용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사례로는 미국의 Startup America Initiative 및 EU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영국의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중국 쑤저우 및 광저우는 공공조달을 개방하였으며, 특히 EU의 경우 혁신 공공조달(Innovation procurement)에서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2.5배 이상 더 많은 계약을 체결(73% vs. 29%)하였으며, 유럽의 공공조달 평균보다 15배 더 많은 계약(29% vs 2%)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국내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의 위원회가 공공기관 구매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신설(18.5)하였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를 통해,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별도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나라창업장터’나, ‘혁신기업 쇼핑몰’ 등의 운영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 글로벌 유망스타트업 유치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례로는 영국은 해외의 디지털 기술(핀테크, 인공지능(AI), 사이버 게임 등) 선도 인력의 확보를 위해 특별 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를 발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French Tech Visa를 통해 기술인재와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비자발급 및 거주허가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창업자와 인재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VI.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내외 스케일업 관련 보고서 등 문헌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진국가의 스케일업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스케일업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분야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케일업에 대한 분야로, 기존의 스케일업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스케일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과학 논문으로서 선행 문헌조사와 사례 등을 통한 스케일업 정책방향에 대한 주요변수도출과 이에 대한 과학적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국내외 창업성장 환경, 기업의 특성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정의와 기준 등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체계 수립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Heidenheimer(1993)는 비교공공정책을 다른 정부들이 어떻게, 왜, 어떠한 효과로 개별 정책행동을 추구하는가를 정의하면서 교육, 보건, 주택 등 개별 정책들을 단순 대조하고 있다. 비록 일반적 체제를 갖추려 하나 기본적으로 개별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각 정부 정책들의 단순대조(simple contrast)를 하며, 그 인과적 추론이나 일반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고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비교공공정책연구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국가 간, 정책 간 기능분류에 의한 비교정책에서 벗어나, 인과적 추론이나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분류지표를 개발하지 못한 것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와 자료는 다양하며 활성화되어 있지만,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최초 제시한 Daniel Isenberg(2017)의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기준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창업 성장 환경 등의 차이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국내 스케일업 생태계 모델 연구를 통해 국내 창업성장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강명연(2019.4.23.). *창업지원에서 스케일업 정책전환"...중기부, 예비유니콘 집중 육성,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0883>

강은숙·이달곤(2005).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행정논총* 43(4)

강희일·김현중·문형돈(2017). ICT 스케일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탐색적 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36-937

김용욱·한정호(2019). 공공기술을 활용한 ‘스케일업(Scale-up)’ 유형별 사례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3-37

김병용(2018.6.10.). *스마트업 창업자 유혹하는 프랑스의 ‘스테이션 F’란?*,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41>

김진호(2019.4.3.). *‘최종구 "우리銀 디노랩, 스타트업 금융사 허브 역할 기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03000137>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2018).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스케일업을 통한 지역중소도시 혁신방안*, STEPI Insight

관계부처합동(2019.3.6.).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대한민국 정부

이갑수·김근영(2004).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이민화(2019).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KCERN 55차 공개포럼

인터비즈스케일업프로젝트팀(2019.9.3.). *스케일업이 스타트업 보다 더 중요한 이유*, 인터비즈,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351568332>

양현봉·조덕희·박중복·김중호(2008).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조만석·김선우(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2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7).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 중소기업부 업무계획*,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년 중소기업부 주요업무*, 보고서

최병성(2019.3.6.). *文대통령 "4년간 12조 '스케일업 펀드'로 제2벤처 붐 조성*, *Views&news*,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6931>

STEPI(2017).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29.

Anderson, J. E.(1994). *Public Policymaking: An Introduction(2n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BDI, N.(2016). *Industrie 4.0-Rechtliche Herausforderungen der Digitalisierung*.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15). *Monitoring-Report Wirtschaft DIGITAL 201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2017). *‘Mittelstand-Digital-Strategien zur Digitalen Transformation der Unternehmensprozesse’*, Mittelstand 4.0- Kompetenzzentren

Choi, B.S.(2019). *President Moon said, “4 years 12 trillion 'scale up' fund to create a second venture boom*, *Views & news*,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6931>

Daniel Isenberg(2017). *Driving economic growth through scale up ecosystems*

Golembiewski, Robert T.(1976). *Perspectives on Public Management : Cases and Learning Designs(2nd)*. F. E. Peacock Publishers, Inc. & white, Michael. (1980), *Cases in Public Management(3r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Heindenheimer, A. J. e al.(1993). *Comparative Public Policy. The Politics of Social Choice in Europe and America* (3rd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IITP(2018). *Scale-up Support Policy in Major Countries, Overseas ICT R & D Policy Trends*, 2018 (07).

InterBizScale-upProjectTeam(2019). *Why scale up is more important than startup*, InterBiz,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351568332>

Involved ministries(2019). *Second Venture Boom Vision Strateg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orge, G., & Scott, S,(2016). *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15 US States*, 1988-2014

Kang, E. S., & Lee, D. G.(2005). Methodological Discussion on Policy Case Studies, *Administrative Paper*, 43 (4)

Kang, H. I., Kim, H. J., & Moon, H. D.(2017).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Job Creation Effect of ICT Scale-up Compan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936-937

Kang, M. Y.(2019). *Scale-up policy shift from Start-up suppor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 Focusing on preliminary Unicorn*, *Newstomat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0883>

Kim, B. Y.(2018). *What is the “Station F” in France, which attracts smart-up founders ?*, *Sun-news*,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41>

Kim, J. H.(2019). *Cheong-gu Choi, “Woori-bank Dion Lab, expected to act as a hub of startups and financial companies”*, *Newspi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03000137>

Kim, Y. W., & Han, J. H.(2019). Case Study of “Scale-up” Types Using Public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Venture Startups*, 33-37

Lee, K. S., & Kim, G. Y.(2004).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ng Technology Startups*, Research Repor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Lee, M. H.(2019). *Scale-up and Unicorn Strategy*, KCERN 55th Open Forum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8). *2018 Small Business Venture Business Plan*, Report, ROK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8). *2018 Small Business Venture Business Plan*, Report, ROK

Cho, M. S., & Kim, S. W.(2017). *US Startup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rends and Issues (29),STEPI

SBA(2014). *Scale-up America*, 2014. 11

Scaleup Institute(2016). *The Scaleup Review on Economic Growth* 2016.

SEP(2019). *Tech Scaleup Europe 2019 Report*, <http://startupeuropepartnership.eu>

SEP Monitor(2018). *Tech Scaleup Europe '18 Report*, <https://startupeuropepartnership.eu/mapping>

- Sherry Coutu(2014). *The Scale-up Report on UK Economic Growth*
- Special Committe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 Assembly(2018). *Policy Stud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 Roadmap*, National Assembly of Korea
- STEPI (2017). *US Startup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Trends and Issues*(29)
- STEPI(2018). *Regional Small and Medium City Innovation through Scale-Up, STEPI Insight*
- Yang, H. B., Jo, D. H., Park, J. B., & Kim, J. H.(2008). *Measures to increase the potential growth rate through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friendly policies*, research reports, and Industry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Domestic Scale-up Policy Di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cale-up Support Policy for Global Startups

Hong, Dae Ung*
Jun, Byung Hoon**

Abstract

The second venture "boom" diffusion strategy can be confirmed to be focused only on financing investment and finance, including achieving 5 trillion won annually in new venture investments, creating 20 unicorns, activating M&As and creating dynamic recovery markets. Of course, existing studies show that the fund is a very important policy for corporate growth, but various policy support will be needed to effectively scale u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scale-up support policies already in operation are analyzed by introducing scale-up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Britain. It also aims to analyze domestic scale-up policies to draw up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ore effective scale-up policies.

Academically, we are very lacking in research on scale-up at home and abroad, and we propose suggestions through this comparative study of policy case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scalability aspects of future research topics related to scale-up.

Keywords: Scale up, Global Scale Up Policy, Domestic Scale Up Policy, Scale up ecosystem model, Founding Policy, Start up

* First Author, Ph D Student,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ung97@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bhjeon@dongguk.edu